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<b>보건복지부</b> | 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배 포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0. 6. 12. / (총 3매)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아동학대대응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 장<br>담 당 자          | 조 신 행<br>배태현 / 신예진 | 전 화 | 044-202-3190<br>044-202-3191 / 3193 |

## 코로나19 유행 속 숨겨진 위기아동 적극 발굴한다

- 실효성 높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위한 대책 논의-
- ▲위기아동 조기발견, ▲정책 실효성 제고, ▲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, ▲국민 인식 개선 등 주요 정책 추진방향 논의 -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6월 12일(금)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다각적 방안을 포함한 “아동 학대 방지대책”을 논의하였다.
  -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였다.
- (위기아동 집중발굴) 최우선 과제로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총력을 기울인다.
  -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거리 두기,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.
- △예방접종 △건강검진 여부 △장기결석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고위험 아동들을 선제적으로 발굴·점검한다.

- 아울러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.
- 실제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.

○ 한편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·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하여 “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”을 운영한다.

-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대상으로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아동부터 시작하여 향후 약 6개월간 총 8,500명의 학대사례를 다시 점검한다.
- 이를 통해 재학대 상황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적용하여 필요 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고, 원가정 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.

□ (종합대책 마련) 코로나19로 인해 숨겨진 위기아동 발굴 등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르게 수행하면서,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 보다 근본적 대책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○ (실효성 제고) 학대상황 발생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‘즉각 분리제도’의 도입, 경찰과 동행조사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추진 등을 검토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.

- (인프라 확충)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「아동학대 조사 공공화」 사업을 1년 앞당겨 이행력을 확보한다.
- 내실 있는 사례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아동쉼터 확충,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.
- (대국민 인식 개선)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, 학대 예방이나 홍보 등도 강화해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나갈 계획이다.
-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“코로나19 유행 속 숨겨진 위기아동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,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단 한 명의 위기아동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- 아울러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잘 살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.”라고 당부했다.